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사회 영구 격리

범행 전 스토킹·강간 유죄...전자발찌 30년 부착

유가족 반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제화해야”

■ 광주지법 1심 선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가족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범원 “사형 선고는 신중해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16·고2)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과 추가 범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장윤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범행 이를 전에는 또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뒤 금·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지만 피해자가 피신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형은 생명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형별인 만큼 선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97년 이후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라며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유가족 “판결로 또 한 번 죽었다”

유가족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은 “소중한 아이를 잃은 것도 모자라 오늘 판결 앞에서 또 한 번 죽었다”

며 “꿈 많던 내 딸 채원이가 느꼈을 참혹한 공포와 남겨진 부모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지옥 같은 슬픔을 재판부가 단 한 순간이라도 제대로 헤아려봤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인 무기징역의 경우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가족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장윤기의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장윤기 측의 증거 훼손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장윤기의 진부함을 이유로 증거인멸에 면죄부를 주는 형법 조항과 공권력 남용·은폐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에 대한 개정도 촉구했다.

유가족은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했던 모든 자들이 법의 단죄를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아픔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27	달맞이	21:03
예보	18:17	달맞이	11:23



광주	☀️	16~23
목포	☀️	17~22
여수	☀️	18~25
순천	☀️	17~24
구례	☀️	17~24
광주	☀️	17~23
임도	☀️	18~24
흑산도	☀️	19~23
진남	☀️	19~25
진도	☀️	17~22

목포	밀물(고)	04:49 / 17:36
	썰물(저)	09:57 / 22:33
여수	밀물(고)	11:55 / 23:48
	썰물(저)	05:15 / 17:50

손님·경찰 폭행...주폭 실행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 B씨(64)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발로 때린 혐의로 기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먹살을 잡아. 다른 경찰관의 근무복에 부착됐던 계급장을 잡아 뜯기도 했다고.

조사 결과 A씨는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하기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

수능 D-50 마무리 학습 전략 영상 공개

특별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시간 배분 등 실전 대비법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두고 고3 수험생을 위한 영역별 마무리 학습 전략 영상을 공개한다.

광주특별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의 막바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과학탐구 등 영역별 학습 전략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10월 초 공식 유튜브 채널 ‘전남광주교육 TV’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은 영역별로 10~20분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마무리 학습 전략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 실전 문제풀이 요령 등을 담았다.

강의는 고3 수업과 수능 대비 지도를 맡아온 현직 교사들이 진행한다.

국어는 전남고 전은기, 수학은 광주여고 심규정, 영어는 수완고 장동술, 사회탐구는 전남여고 장정민, 과학탐구는 광주

경신여고 정윤희 교사가 각각 맡았다.

국어 영역에서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독서 지문 핵심 개념과 문학 작품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문제를 무리하게 풀기보다 최신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의 주요 문항을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수학은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를 다시 확인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다.

또 EBS 연계 문항을 활용해 유형별 접근법과 시간 배분 전략을 익힐 것을 제안했다.

영어는 문제 난이도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해결 가능한 문항을 정확하게 맞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은 10월 초 광주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전남광주교육 TV’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최근 3년간 96건 발생...검거된 피의자 101명

성적 촬영물을 발미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남광주지역에서 매년 3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에서 접수된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14건, 2024년 23건, 2025년 13건 등 모두 50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17건, 16건, 13건 등 모두 46건이 발생해 전남광주지역에서 총 96건에 달했다.

광주는 2024년 사건이 전년보다 9건 증가했다가 2025년 13건으로 감소했다. 전남은 2023년 17건에서 2024년 16건, 2025년 13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피의자 검거도 꾸준히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2023년 15건에서 16명이 검거됐으며, 2024년에는 20건 22명, 2025년에는 12건 11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3명, 2명, 2명이다.

전남에서는 2023년 18건 23명, 2024년 15건 14명, 2025년 13건 15명이 검거됐다. 구속 인원은 각각 6명, 2명, 2명이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는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범죄다. 실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뿐 아니라 유포를 발미로 추가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관련 범죄는 지속되고 있

다. 전국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은 2023년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등 최근 3년간 2631건이 접수됐다.

특히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1년을 넘긴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 사건 가운데 발생 후 3개월 이내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358건에 그쳤다.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행의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문제 등으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 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범정부 재수색 현장지휘본부 추진상황설명회

무안공항 참사 재수색, 유해 1600여점 확인

5개월간 2만1918㎡ 수색...희생자 141명 DNA 확인

유가족 “징계 결과·사고 책임 규명 왜 안 알려주냐”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 무안국제공항 제2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전면 재수색에서 희생자 140여명의 유해 1600여점이 추가로 확인됐다.

범정부 재수색 현장지휘본부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추진 상황 설명회’를 열고 지난 5개월간의 수색 경과와 유해·유류품 수습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제주항공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

는 재수색 방법과 진행 경과 설명, 수색 구역 현장 방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재수색은 지난 4월 13일부터 2만1918㎡ 규모의 사고 현장을 둔덕, 담장, 진입 등 서면, 진입등 주변, 접수정, 진입등 등면 등 6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장 육안 수색을 시작으로 수색지역 굴토, 굴토 흙 체질 작업, 관계기관 인계 등의 방식으로 유해와 유류품, 기체 잔해 등을 확인했다.

현장지휘본부는 당초 5만7000여㎡를 재수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수색 과정

에서 유해와 유류품, 기체 잔해가 발견되는 양상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해나 유류품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구역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구역은 범위를 조정했다.

다만 일부 로컬라이저 구간은 굴토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유가족 측 의견에 따라 수색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장지휘본부는 해당 구간에서도 일부 기체 잔해와 유해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가족 측에 추가 굴토 수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해(추정)는 1709점, 유류품은 906점, 기체 잔해는 1688.9kg으로 집계

됐다.

유해(추정) 1709점 가운데 1609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을 통해 희생자 141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해(추정)는 현장 기록과 임시 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유족 인계 등의 절차를 거친다. 유류품은 유해와 별도로 보관한 뒤 제주항공에 인계해 소유자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유가족들은 국토교통부와 전남경찰, 전남소방 등의 징계 절차와 로컬라이저 관련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유가족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실



무안공항 제2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30일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을 둘러보고 있다.

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컬라이저 불법 증축만 하지 않았어도 모두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로컬라이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 지시했고 누군가는 공사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섭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대외협력TF팀장은 “정부 가 유해 재수색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정부가 지난 5개월 동안 어디를, 어떻게 수색했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유가족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추정 물체 등이 발견됐을 때 현장 보존과 관계기관 수습·감식, DNA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제2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월 1일 국회에서 유해 방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